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경기도 성남시중원구	
후보자명	김미희	기호	4	소속정당명	통합진보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한미FTA 등 불평등 조약 폐기				
<div>■ 선정 이유</div> <div>○ 한미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자유화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 시스템을 위협함</div> <div>-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하고 자유화 및 개방 후퇴 금지제도(레킷 조항)와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를 빌미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, 제도 정책 및 조례까지 위협하고 있음</div> <div>- 미국은 한국의 관세, 조세, 통관절차, 수량제한, 규제 체제, 농축산물, 의약품, 자동차, 금융서비스, 방송광고, 라벨링,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음.</div> <div>- 미국은 현재 한미FTA 미국 이행법안과 대한민국 이행법안을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있음.</div> <div>○ 한미 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도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을 제약함</div> <div>■ 목표</div> <div>○ 약탈적 한미FTA폐기로 통상주권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기반 마련</div> <div>■ 방법</div> <div>○ 현재 한미FTA는 발효 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, 우선적으로 발효저지를 그리고 발효가 된다면 폐기를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함.</div>					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금지				
<div>■ 선정이유</div> <div>○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불과 1.1%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는 기업 이익의 1.1%만 가져가야 함, 그러나 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5%에 달해 소유, 지배 괴리도가 큼</div> <div>- 총수 일가, 2세, 3세들에게 그룹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2세, 3세들에게 전용하려는 유혹이 큼. 따라서 사익추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 수단이 필요함</div> <div>■ 목표</div> <div>○ 재벌 소유, 지배 괴리도가 커서 사익추구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점을 극복</div>					

## ■ 방법

### ○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(자본시장통합법 개정)

-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%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 규정 도입

### ○ 상장회사 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(상법 개정)

- 법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끝난 후 5년동안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 (은행법 제18조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시)

- 다수의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사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

### ○ 독립이사제도 도입(상법 개정)

- 경력, 학력, 총수일가와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된 인물만을 임용할 수 있음

-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

- 일감몰아주기 등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를 승인하고자 하면 친족이사 등 비독립이사는 제외되어야 함

공약번호: 3

공약 제목 :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%까지 확대

## ■ 현황 및 문제점

-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거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이며, 자가주택 촉진정책의 전환 및 임대주택대폭확대 없이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없음. 더욱이 여러 정당들이 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의 총량중심의 공급확대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야기하고 지자체간 갈등 요소가 됨.

- 소요주택 2010년 기준으로 280만호 정도 필요함.

## ■ 목표

-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걱정이 없도록 주거 공공성을 획득함.

-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최고 20%까지 확대함.

## ■ 방법

- 1단계(5년간) 임대주택 의무보유 제도화 임대주택 10%(연 20만호 공급)

- 2단계(5년간) 임대주택 15%(연 20만호 공급)

- 3단계(5년간) 임대주택20%(5년간 55만호 이상공급)

## ■ 재원

지역별 임대주택 20%확보를 위한 소요재정마련 3가지 방안 병행

소요주택 주택 280만호 \* 호당 1억원 = 280억원

\* 총 소요액대비 연2.5% 재정투입 최고 3.8조원(기금보존을 위한 조치)  
 \*\*임차인 본인 부담 50%로 하여 반값 임대료를 실현하고 단 주거비 월부담  
 이 소득의 20%를 넘지 않도록 소득별 임대료차등제를 실시함  
 => 연금대출 등으로 인한 정부이자부담 4.3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에 비례한 정부출  
 연 연3.8조원 일반회계재정에서 연 8.1조원 추가배정

공약번호: 4	공약 제목 : 중소기업인 보호 특별법 제정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■ 현황 및 문제점

- 최근 4년동안 대형마트 9조2천억원매출증가 VS 재래시장매출 9조천억원감소
  - 최근 4년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9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에 재래시장 매출은 동일기간 동안 9조천억원이나 감소하였음.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이 중소기업인 상권을 직접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줌
  -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인근 중소기업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%, 고객은 37%(일평균 22명) 감소했다. 유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편법 SSM 진출 급증
  - 특히 2009년이후 중소기업인들이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SSM 제한 요구하자 2010년부터 현행법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SSM 급증함. 2010년 이후 2011년5월까지 전체 신규 SSM의 40%가 편법 SSM이었음.

■ 방법

1.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
2.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
3.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
4. 중소기업인 보호정책의 방해꾼, FTA폐기
5. 재벌기업 순환출자금지 및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
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건설노동자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■ 현황 및 문제점

-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주민중 건설노동자 비중이 20%를 넘고 있음.
-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기적인 일자리로 생계의 막막함
- 4대보험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.

■ 방법

- 건설노동자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
- 건설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 혜택 지원 강화
- 건설노동자 일자리 쉼터 만들기
-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장 제도 개정